

“선관위 사태 국정조사 추진할 것”

민주 한병도 원내대표, 투표용지 부족 관련 “국회의장 등과 협의… 국조 주도할 것”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K-보트(voc)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시스템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고 중동에서도 배우려고 하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 투표지 부족이란 부끄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노태도 선관위위원장(은) 사퇴했지만 그냥 넘어갈 수 없고 국정조사



를 추진하겠다”며 “이번에 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게 개혁을 과감히 할 것”이라고 했다.

국정조사 추진 시점에 대해선 “(국회)의장이 선출됐으니 여야가 이것에 대해서는 이견 없을 것”이라며 “어떤 형식 방법으로도 빠르게 추진이

가능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된 이후 추진할 것인가란 질문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이 (직무대행)하고 있으니까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며 “아당과 협의하고 우리가 주도할 것”이라고 했다.

또 “현재는 상임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으니 굳이 기다릴 필요 없이 국회의장 아당과 이야기해서 가장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투표지 사태와 관련된 특검을 언급한 것을 두고 “이 정도 내용은 국조를 해도 충분히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의 경우는 국정조사를 하려고 해도 한계가 많이 드러난 경우가 있는데 소관 기관을 조사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전원의부 인사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 설치하는데 민주당 인사가 참여하는지란 질문에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선관위의 의견을 들었을 뿐”이라며 “원내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다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도민이 준 당선증 전북 대도약으로 보답”

이원택 도지사 당선인 민선 9기 도정 준비 돌입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당선증을 교부받고 인수위원회 구성을 위한 첫 보고를 받으며 민선 9기 도정 출범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이 당선인은 지난 4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교부받은 뒤 “이 당선증은 전북의 새로운 도약을 염원하는 172만 도민이 보내준 명령장”이라며 “도민의 선택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보내주신 성원과 정책, 그리고 변화에 대한 열망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전북이 더 이상 대한민국의 변방이 아니라 미래를 선도하는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부으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전북 발전 구상을 제시했다.

이 당선인은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맞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며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 원 규모 조기 투자와 퍼지컬 AI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전북 경제의 체질을 혁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1만호 기자

이어 “도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가장 빠르게 만들어내는 유능한 도지사가 되겠다”며 민생과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아날 이 당선인은 선거사무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들로부터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첫 업무보고를 받으며 본격적인 인수절차에도 착수했다.

보고서는 주요 현안 사업과 국가 예산 확보 상황 민선 9기 출범 준비 사항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이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한 뒤 도정 조직과 예산, 주요 현안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핵심 공약의 실행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민선 9기 전북도정의 첫걸음을 내디딘 이 당선인은 중앙정부와의 협력, 미래산업 육성, 도민 통합을 핵심 축으로 삼아 전북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도정 인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만호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 “개헌 국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민생 효능·국민 주권·미래 도약·국익 외교 비전도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조정식 의장은 지난 5일 “국민 주권을 실현하고 효능감 있는 책임 정치를 만들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된 직후 당선 인사를 통해 “이제 내내이면 1987년 헌법 체제가 40주년이 된다. 이제는 국회가 오랫동안 미뤄왔던 숙제를 마칠 때다. 현 헌법 체제로는 변화된 시대에 걸맞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장은 “국민참여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해야 한다”며 “권력 구조 개편으로 책임 정치를 강화하고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해 삼권분립 정신을 실현해야 한다. 지방분권 원칙을 명시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신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내년은 전국 동시 선거가 없는 해로 헌법 개정 논의를 제대로 해볼 수 있는 절호의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열망과 나라의 미래를 담은 헌법 개정을 꼭 이뤄서 시대적 책무를 완수하자. 이번 22대 후반기 국회가 대한민국 의정사에 남을 개헌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제정당 대표들과 의원 여러분께서 꼭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조 의장은 △민생 효능 국회 △국익 외교 국회 △미래 도약 국회 △국익 외교 국회 등 비전도 밝혔다.

그는 “속도감 있는 민생 입법 통과로 국민에게 정치 효능감을 돌려드리겠다.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한 법률은 해당 회기 내 본회의 처리를 원칙으로 해서 완결성을 갖추겠다”며 “단 하나의 민생 법안도 국회에서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입법 박람회와 사회적 대화를 정례화하고 청원 심사를 실질화하겠다.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여 국민 승리의 역사를 기념하겠다”며 “미래 도약을 위한 국회의 기능과 역량을 뒷받침하고, 의정 직속 자문기구를 출범시켜 이를 뒷받침하겠다. 국회의 AI 전환을 추진해 입법 생산성과 참여를 높이고 국민의 입법 참여 폭을 넓혀겠다”고 했다.

이외 “의회 외교가 정부 정상외교, 공공외교와 함께 국가 외교 전략의 3대 축으로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의회 외교를 체계화하고 강화하겠다”며 “아울러 K-민주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한 국제 홍보 및 교육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국회의원은 주권자 국민의 대리인이요, 국회의장은 가장 앞장서 국민 주권을 지키는 일꾼이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명령만을 따르겠다”며 “국민 앞에 성과로 증명하겠다. 말이 아닌 결과

로 정쟁이 아닌 민생 국회의 효능감으로 국민에게서 체감하는 22대 국회의 성과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22대 전반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의결과 관련해선 “그날 밤 국민과 국회가 함께 지킨 것은 대한민국 헌정만이 아니었다. 3·1운동·4·19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

의 역사를 지켰고, 호국영령과 민주열사들이 남기고 간 사명을 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전 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다”며 “후반기 국회 역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국회의 사명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보냈다. /뉴시스



조정식 신임 국회의장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 후 의장석에 올라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시민들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할 것”

조지훈 전주시장 당선인 감사 인사·녹두관 참배 당선증 수령... 행보 본격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주시장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조지훈 당선인이 당선 이틀째인 5일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되새기는 녹두관을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당선인 행보에 나섰다.

조 당선인은 이날 오전 7시 30분 전주 완산구 효자동 KT사거리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며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그는 선거 기간 보내준 시민들의 성원에 감사를 표하고, 전주의 변화와 발전을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조 당선인은 동학농민혁명 무명 농민군 지도자의 유골이 안장된 녹두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선거 과정에서 강조해 온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과 시민주권 실현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조 당선인은 그동안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기 위한 국민 운동 추진과 전주화약 공원 조성 등을 통해 전주를 동학농민혁명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해 왔다.

녹두관 방문을 마친 조 당선인은 금암동 선거사무실로 이동해 시민주권 선거대책위원회 해산식을 가졌다.

이어 오후 2시 전주시선거관리위원회 회를 방문해 당선증을 수령했다.

그는 대표 인사말을 통해 “당선증에는 시민의 삶을 책임지고 도시의 틀을 혁신하라는 시민의 명령이 담겨 있다”며 “시민주권의 열린 시정을 통해 전주 발전과 변혁의 문을 힘차게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지훈 전주시장 당선인은 앞으로 인수 준비와 시장 운영 구상에 집중하며 민선 전주시장의 새로운 비전과 정책 추진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1만호 기자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기 위한 국민 운동 추진과 전주화약 공원 조성 등을 통해 전주를 동학농민혁명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해 왔다.

녹두관 방문을 마친 조 당선인은 금암동 선거사무실로 이동해 시민주권 선거대책위원회 해산식을 가졌다.

이어 오후 2시 전주시선거관리위원회 회를 방문해 당선증을 수령했다.

그는 대표 인사말을 통해 “당선증에는 시민의 삶을 책임지고 도시의 틀을 혁신하라는 시민의 명령이 담겨 있다”며 “시민주권의 열린 시정을 통해 전주 발전과 변혁의 문을 힘차게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지훈 전주시장 당선인은 앞으로 인수 준비와 시장 운영 구상에 집중하며 민선 전주시장의 새로운 비전과 정책 추진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1만호 기자

“토지개발 인허가 가능 여부, AI가 사전 진단”

국토부, 서비스 본격 추진... 민원 처리기간 30% 단축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5일 범정부 공공 인공지능 전환(AI)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된 AI 기반 통합 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 개발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 합동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토지개발과 관련한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인공지능(AI) 기술로 사전에 분석·진단해 국민과 공무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농지전용, 산지전용, 건축허가, 공장설립 등 토지개발 행위는 200여 개의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양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건축허가의 경우 23개, 공장설립은 최대 36개에 달하는 의제 협의가 필요해 민원인이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인허가 처리에도 통상 2개월에서 길게는 1년 가까운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개발하는 AI 기반 통합 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는 토지 정보와 각종 법령, 행정절차를 AI가 종합 분석해 개발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를 사전에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국민 누구나 개발 예정 토지의 인허가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귀촌을 준비하는 직장인이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의 농지를 구입해 일부에는 주택을 짓고 나머지는 텃밭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입력하면, AI는 토지 면적과 지형, 각종 규제, 관련 법령 등을 종합 분석해 적합한 후보지를 제시한다.

또한 인허가 절차, 예상 부담금, 소요 기간 등을 사전에 알려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 또한 인허가 가능 여부와 제한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민원 준비 과정이 크게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의 법령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 기간도 단축돼 민원 준비 및 처리 기간이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연간 약 70억 원의 행정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교통부 이대섭 국토정보정책과장은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인허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디지털 트윈 국토와 DX·AX 혁신을 기반 정성과 실효성을 점검한 뒤 2027년 하반기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전국 단위 대국민 서비스와 공무

원 지원 서비스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특히 지자체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나 고시 등으로 토지 용도가 바뀌는 경우에도 관련 정보가 시스템에 자동 반영되도록 구축해 최신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범운영 과정에서는 주민들의 개발 수요와 현장 의견도 적극 수렴해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국민이 인허가 가능 여부와 제한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민원 준비 과정이 크게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의 법령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 기간도 단축돼 민원 준비 및 처리 기간이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연간 약 70억 원의 행정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교통부 이대섭 국토정보정책과장은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인허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디지털 트윈 국토와 DX·AX 혁신을 기반 정성과 실효성을 점검한 뒤 2027년 하반기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전국 단위 대국민 서비스와 공무

원 지원 서비스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특히 지자체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나 고시 등으로 토지 용도가 바뀌는 경우에도 관련 정보가 시스템에 자동 반영되도록 구축해 최신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범운영 과정에서는 주민들의 개발 수요와 현장 의견도 적극 수렴해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국민이 인허가 가능 여부와 제한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민원 준비 과정이 크게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의 법령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 기간도 단축돼 민원 준비 및 처리 기간이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연간 약 70억 원의 행정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교통부 이대섭 국토정보정책과장은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인허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디지털 트윈 국토와 DX·AX 혁신을 기반 정성과 실효성을 점검한 뒤 2027년 하반기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전국 단위 대국민 서비스와 공무

원 지원 서비스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특히 지자체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나 고시 등으로 토지 용도가 바뀌는 경우에도 관련 정보가 시스템에 자동 반영되도록 구축해 최신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범운영 과정에서는 주민들의 개발 수요와 현장 의견도 적극 수렴해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국민이 인허가 가능 여부와 제한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민원 준비 과정이 크게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의 법령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 기간도 단축돼 민원 준비 및 처리 기간이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연간 약 70억 원의 행정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교통부 이대섭 국토정보정책과장은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인허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디지털 트윈 국토와 DX·AX 혁신을 기반 정성과 실효성을 점검한 뒤 2027년 하반기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전국 단위 대국민 서비스와 공무

원 지원 서비스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특히 지자체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나 고시 등으로 토지 용도가 바뀌는 경우에도 관련 정보가 시스템에 자동 반영되도록 구축해 최신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범운영 과정에서는 주민들의 개발 수요와 현장 의견도 적극 수렴해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국민이 인허가 가능 여부와 제한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민원 준비 과정이 크게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의 법령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 기간도 단축돼 민원 준비 및 처리 기간이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연간 약 70억 원의 행정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교통부 이대섭 국토정보정책과장은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인허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디지털 트윈 국토와 DX·AX 혁신을 기반 정성과 실효성을 점검한 뒤 2027년 하반기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전국 단위 대국민 서비스와 공무

원 지원 서비스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특히 지자체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나 고시 등으로 토지 용도가 바뀌는 경우에도 관련 정보가 시스템에 자동 반영되도록 구축해 최신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범운영 과정에서는 주민들의 개발 수요와 현장 의견도 적극 수렴해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국민이 인허가 가능 여부와 제한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민원 준비 과정이 크게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의 법령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 기간도 단축돼 민원 준비 및 처리 기간이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연간 약 70억 원의 행정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교통부 이대섭 국토정보정책과장은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인허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디지털 트윈 국토와 DX·AX 혁신을 기반 정성과 실효성을 점검한 뒤 2027년 하반기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전국 단위 대국민 서비스와 공무



원주민의원 당선인들 의정활동 준비 본격화

원주민의원 의의식 의장이 지난 5일 원주민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10대 원주민의원 의원 당선증 교부식에 참석해 당선인들을 축하하고 국민의 행복과 원주민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당부했다.

이날 당선증을 교부받은 당선인은 가선거구 소병호·이진영·유연연·유이수·나선거구 최광호·성종기·심부건·다선거구 김규성·임귀현, 비례대표 이미경·이효진 등 총 11명이다.

당선증 교부식에 함께한 유의식 의장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축하 인사와 함께, “제10대 원주민의원을 잘 이끌어 국민의 행복과 원주민 발전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원주민의회는 오는 15일 당선인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7월 1일 시작되는 제10대 원주민의원 의원 임기에 대비해 원활한 의정활동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원주=염재복 기자

부안군수 최초 3선 새 역사 쓰다

권익현 당선인, 민선 9기 준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안군수 최초 3선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쓴 권익현 부안군수 당선인이 5일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교부받고 민선 9기 출범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위원회 회의실에서 당선증 교부식을 개최하고 부안군수와 광역·기초의원 당선인들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

권익현 부안군수 당선인은 당선증을 받은 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는 끝났지만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이라며 “당선인 모두가 국민의 선택을 받은 만큼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화합과 소통을 바탕으로 부안의 새로운 발전을 이끌어 가겠다”며 “기본소득 정책 등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현 부안군수 당선인은 오는 7월 1일 취임을 앞두고 주요 현안과 공약 이행계획을 점검하는 등 민선 9기 출범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부안=김석진기자